"도 저출산정책 개선 시급"

김철수 도의원, "육아휴직수당 월봉의 100%로 확대 · 난임치료 지원 늘려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정읍1 · 더불어민주당)은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저출산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하며, 육아휴직 수당제도 개선과 난임치료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국에서 수년간 많은 저출산 정책이 쏟아졌음에도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인 0.84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국가라는 오명까지 얻게 됐다며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육아휴직수당은 휴직기간 3개월까지 월봉의 80%를 최대 150만원까지, 4~12개월까지는 월봉의 50%금액을 최대 120만원까지 받는데, 이마저도 휴직기간 동안 수당의 85%를 복직 7개월째 나머지 15%를 분할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월봉의 100%로 확대하고 휴직기간동안 전액 지급하며, 난임 시술비 지원 적용횟수와 금액을 폐지하는 등 난임시술 비용 지원 확대와 질병 등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해 난임을 위한 모든 치료를 보험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김철수 의원은 "인구구조의 퇴행적 변화는 우리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기반마저 흔들 수 있다"며 "시대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벼랑 끝에 서 있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국민건강 최우선 교섭 합의에 감사드린다"

이명연 도의원,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 관련… 전북본부에 감사글 전달

전북도의회 이명연(환경복지위원장) 의원이 2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간의 교섭합의와 파업 철회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에 감사글을 전달했다.

이명연 의원은 "그 무엇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는 정신으로 교섭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지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교섭 합의로 도민들께서 이전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K방역의 성공은 온전히 일선 현장의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땀방울과 헌신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명연 의원은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한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면 확대 시행, 간호사 1인당 환자 수(ratios)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제 민간의료기관 확대 시행, 야간 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관리료 모든 의료기관 적용, 비정규직 고용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전북도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임실 · 부안 지역 사업 대상지 2곳을 방문,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도의회 행자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지 현장 점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2일 전북도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임실 · 부안 지역 사업 대상지 2곳을 방문,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자위원들은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 및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부지'를 방문해 관련 부서로부터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유재산 취득이 행정수요나 도정정책에 꼭 필요한 것인지와 대상부지가 행정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최적지인지 등에 대해 살폈다.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공유재산은 도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취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부지가 적정한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내 소규모학교 통폐합 신중해야"

김희수 도의원

도내 출생 아동이 급격히 줄어 가까운 미래에 도내 면단위 학교들이 자연 폐교될 위기에 놓여진 가운데, 학교 통폐합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제384회 임시회 부교육감 대상 정책질의에서 "도내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통폐합 이후 농어촌 교육문제가 얼마나,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면서 "특히, 통폐합보다는 다같이 어우러지는 학교가 되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학교 통폐합 문제는 농어촌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과정의 정상화, 그리고 교육재정의 합리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농어촌 학교는 존치되어야 함을 전제로, 추후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도내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 교육문제 해결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실태에 기반을 둔 점검과정이 우선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폐합보다는 농어촌 학교를 살리되, 도시학교 학생들이 농어촌 체험학습을 위한 1박2일 캠프를 농어촌 학교에서 실시하거나, 농어촌 학교를 도시학교의 분교 시스템으로 정책화한다면, 다함께 어우러지는 도내 학교현장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말 학교재단으로부터 해고된 전주예술중고 소속 6명의 교사들의 지난 1일 복직한 것에 대해 "교사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라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다. 도교육청은 복직 교사들의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고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탄소중립 적기 실현'

민주 이원택 의원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50탄소중립 적기 실현을 위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 · 부안군)은 2일 온실가스 감축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농업식품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립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농업부문 감축목표인 160만톤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 확대를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한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원택 의원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 · 관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등에 배출권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기 달성하고자 기준을 마련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전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 했다"며 "농업부문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책을 통해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도의회 상임위 의정 중계석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 돕겠다"

농산경위, 전북테크비즈센터 찾아 현장 활동
농축산식품국 · 일자리경제본부 등 대상 추경 심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2일 전주시 혁신도시에 소재한 '전북테크비즈센터'를 방문,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위원들은 전북 연구개발 기업과 창업, 비즈니스의 거점 공간이 될 센터 현황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테크비즈센터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기관 · 기업 입대공간, 창업보육공간, 전북특구본부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현재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진행중이다.

센터 현황을 청취한 김철수 위원장(정읍 1)은 "전북은 전국 5개 특구 중 다섯 번째로 지난 2015년 지정돼 올해 조성 6년차로, 기술이전 및 출자, 창업 지원 등 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신기술 창출과 사업화를 꾸준히 지원, 지역산업 성장동력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북이 전국 최고의 특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주영은 의원(전주 9)은 "현재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술사업화를 위한 업무공간과 창업을 위한 보육공간 제공은 물론이며,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전북디지털융합센터 등 연관기관과 특허관련 기업 등 사업화 관련 기업들이 같은 건물에 입주하면,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공동 지원체계 구축으로 창업지원 거점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현지의정을 계기로,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농생명과 융복합 소재부품산업으로 특화된 전북연구개발특구가 명품특구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전북도 농축산식품국, 일자리경제본부, 혁신성장산업국에 대한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김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신규 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 요인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하는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총액으로 보면 작년 기준 국비 400억 원정도였으나, 올해는 250억 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감액 수준이 시.군에서 예측가능한 수준인지 충분한 검토"를 주문했다.

/유호상기자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2일 전주시 혁신도시에 소재한 '전북테크비즈센터'를 방문,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도내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전문 의료진 유치 힘써달라"

환복위, 추경심사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2일 제384회 임시회 상임위 제2차 회의에서 전북도 환경녹지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복지여성보건국을 대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환복위 소속 의원들은 신규 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분석해 예산 낭비 요인 등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설치 지원사업에서 도내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분만 시설 및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성 있는 의료진 유치에도 힘써주기를 주문했다.

나기학 의원(군산1)은 상수도 배관 누수가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고, "도서지역 안전과 관련, 바닷물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형석 의원(비례)은 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서 폐업지원금 및 어선과 어구 등 잔존가액을 지급하는 것 외에 영업권 회수 여부를 지적하며 "지난 1997년부터 시작한 구조조정에 따라 도내 어업권 감축 현황도 상세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도내 학교폭력 근절 다각도로 노력해야"

교육위, 추경 심사 앞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2021년도 전북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앞서, 류정섭 부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2일 실시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교육부가 지난 8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초등돌봄교실 확대를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도교육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류 부교육감은 지적에 대해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 일괄적으로 확대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타 시.도는 돌봄시간을 확대해 교육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돌봄시간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은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며 "돌봄시간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지난 6월 5분발언을 통해 도교육청이 유아교육에 투입하고 있는 하모니사업을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노인일자리와 인력풀 확대를 촉구한 것이 이번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실현됐다"며 "앞으로도 전북이 타 시 · 도가 벤치마킹하는 협력적 교육거버넌스의 행보를 지속해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수 위원장(전주6)은 "도내 학생 자살률이 유독 3월에 높다"며 "이것은 학교 내 문제가 학생 정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학교폭력 근절은 물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마음에 상처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드킬 예방시스템 구축 통한 안전 도로환경 조성을"

문건위, 추경 심사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일 제3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의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이정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3개 실국의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로드킬 예방시스템 구축과 3일 열리는 전북도민체전이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마련,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로드킬 등 바로신고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동물보호 유도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로드킬 예방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로드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들에 우선적으로 방어벽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영규 의원(익산4)은 로드킬 사고는 동물은 물론 운전자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사고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또한, 오는 3일 개막 예정인 도민체전에 대해 단순히 4단계인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 차원에서 도민안전실과 협의를 통해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호상기자